

니다. 이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타겟팅이었습니다.

제2막: 2억 여원의 주인을 찾다

추출된 리스트를 바탕으로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중 A사는 IT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형적인 중소기업이었습니다. A사는 지난 2년간 사업 확장을 위해 신규 인력을 대거 채용했으나,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해 고용지원 공제 혜택을 전혀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A사 담당자는 반신반의하며 구청에 문의했습니다. “저희가 공제 대상이 맞습니까? 세무 대리인도 놓친 부분이라 몰랐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사가 놓친 공제액을 산출하여 제시했고, 경정청구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검토 결과 A사는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는 즉시 절차를 밟아 A사에게 과오납금 4,500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A사 대표는 “세금을 건어가는 곳인 줄만 알았던 구청에서 먼저 환급금을 찾아주니 놀랍다”며, “환급금은 직원들의 복지와 재투자에 유용하게 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에필로그: 데이터가 증명한 적극 행정

A사의 사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약 2억 원 규모의 세금이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 성과는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신청서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기술을 활용해 능동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세무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